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전두환 어디까지 아시나요

학살 주범에 삼청교육대 인권 유린…죄 없는 시민·학생을 간첩 내몰아
비협조적인 기업 해체·재임 중 9500억 갈취·언론 탄압 등 악행 수두룩
경제 안정?…1980년대 '3저 현상'따른 호황 등 역사적 팩트 체크 필요

'전두환 논란'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망언으로 지역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두환씨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놓고 전두환 독재정권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대체 뭘 잘했냐'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사실상 책임자로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은 5·18 민주항쟁을 피로 짓밟으며 시민군을 진압했다.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대검과 곤봉을 휘둘렀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집단 사살했다. 이들 계엄군을 사실상 지휘한 게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런데도 40년이 넘도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삼청교육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죄없는 시민과 학생을 북한 간첩으로 내몰았다. 학림사건·부림사건, 재일교포 간첩 사건과 납북 어부 사건 등 조작된 간첩 사건만 수십건에 이른다. 이같은 간첩 사건을 통한 반공 정치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인사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모두 전씨 정권에서 자행된 일이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잘 성장시켰다'고 말하는 것도 당시 상황을 모르는 잘못된 얘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전씨의 독재가 이뤄지던 1980년대의 경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현상'으로 인한 호황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3저 현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80년대 중반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경제는 당시 3년 연속 12%를 넘는 고성장을 이뤘고 80년부터 89년까지 연평균 8.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은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아래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수백억을 빼앗았고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중분해시키는 등 독재의 칼을 휘둘렀다.

국제그룹이 이 시기, 부실기업 정리라는 미명 아래 공중분해됐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재계 7위, 재계 9위의 국제그룹과 삼호그룹이 해체되고 삼성, 현대, LG, 대우, SK그룹 등이 혜택을 받았다. 정경유착의 수혜를 얻은 기업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공룡재벌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낳게 되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의 지난 1997년 수사 결과, 전씨는 재임 중 모두 9500여억원을 거둬들였고 이중 기업에게 뜯어낸 비자금은 7000억원대였다.

언론통폐합, 보도지침 등 언론탄압 정책도 살벌했다. 대학생들의 시위와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인 이른바 '녹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는 말을 놓고 빈약한 역사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운 전두환씨를 놓고 '정치를 잘했다', '경제를 안정시켰다'는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전씨의 악행을 포장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5·18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하고 부산을 찾아가 전씨를 닮겠다고 망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주의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업체 대표 구속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고(故) 홍정운(18)군 사고 〈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와 관련, 현장실습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1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우려를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잠수 자격이 없는데도 홍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2인 1조 등 사전 안전 조치 등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홍군이 잠수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인 홍군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발 정보 사전 입수해 투기 담양군의원 구속

현직 담양군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A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확대할 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A 의원 외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 2018년 10월께 자녀 2명의 명의로 해당 지역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의원이 당시 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고서면 보촌리 일대 토지(88만5731㎡)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청장 음해성 소문 낸 1명 송치

광주남부경찰은 20일 김병내 남구청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9월 자신과 관련된 음해성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입증이 가능한 A씨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앞서 김 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해성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독감 예방접종 행렬 21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대 절차상 하자…박사 논문 취소 부당"

광주지법 행정 1부 판결

전남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 시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A씨에 대해 한 박사학위 수여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 '이미지 중복 사용 및 변조'라고 판단한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들어 해당 논문을 취소한 전남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논문 취소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 검증 시효를 넘어서 이뤄진 조사와 처분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기 전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 박사학위 논문이 2007년에 제출, 수여된 점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5년으로 정한 당시 규정 등을 들어 '검증시효를 지나 이뤄진 처분'으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삼호 구청장 항소심도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진행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며 불법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식품업체가 2~3일 내에 출고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할 나물을 공단 뿐 아니라 사찰,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상가매매(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5천(융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융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융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8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6십5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